K-웹툰, 세계서 러브콜 '거래액 1조'… 잠재력 무궁무진

네이버웹툰 글로벌시장 확대 목표
구글플레이서 만화분야 수익 1위

카카오웹툰 日 넘어 대만·태국 진출
인니 웹툰업체 인수 등 기반 마련

신의탑·이태원클라쓰·계약우정 등
드라마·영화 2차콘텐츠 제작 활발

이태원 클라쓰 웹툰(왼쪽)과 드라마 포스터. /카카오

K-웹툰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 웹툰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 콘텐츠 제작도 활발하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문화 확산과 모바일 사용 시간 증가 영향으로 향후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웹툰의 글로벌 거래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면서 만화 분야 수출액이 전년대비 13.6% 성장했다. 콘텐츠 부문 11개 장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시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웹툰이 미국 시장을 거점으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웹툰 미국 법인을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IP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웹툰 시장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국내 웹툰 작가들의 글로벌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네이버웹툰은 미국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웹툰 콘텐츠가 아시아와 북미를 넘어 유럽과 남미 지역 등 아직 웹툰이 자리 잡지 않은 지역에까지 그 저변을 빠르게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11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버전을 출시한 바 있다. 현재 네이버웹툰은 9개 언어로 100개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말 기준 100개 국가의 구글플레이 앱마켓에서 만화 분야 수익 기준 1위를 기록했으며, 월간 이용자 수(MAU)는 6000만명에 달하는 등 막강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의 웹툰 서비스는 일본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2016년 4월 론칭한 카카오재팬의 만화 플랫폼 픽코마는 다음해인 2017년 연간 거래액이 14배로 늘어났고, 2018년 156% , 2019년은 130%(2.3배) 증가해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외형성장뿐 아니라 내실도 다져가고 있다. 픽코마는 작년 4분기 첫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가 예상된다.

카카오는 일본에서의 웹툰 경쟁력 강화와 함께 올해 대만과 태국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지는 2018년 인도네시아의 1위 유료 웹툰 유통업체인 네오바자르를 인수하며 글로벌 시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웹툰 산업의 성장과 함께 웹툰의 IP를 활용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 콘텐츠 제작도 활발하다. 인기를 끈 웹툰을 활용하면 일정 수준의 흥행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네이버웹툰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신의 탑'을 지난 4월 전 세계에 공개해 지난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신의 탑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개국 합작으로 만들어져 주목받았다.

지난달 애니메이션 '갓 오브 하이스쿨'도 전 세계에서 방영을 시작했다. 갓 오브 하이스쿨은 지난 2015년 동명의 모바일 게임, 2016년 모바일 액션 RPG 장르 게임인 '2020 갓 오브 하이스쿨 with 네이버웹툰'을 차례로 선보이며 원천 콘텐츠로서 IP의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유미의 세포들', '연의 편지', '나노리스트' 등도 애니메이션 제작이 확정돼 국내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지는 올해 웹툰을 바탕으로 한 '이태원 클라쓰', '메모리스트', '계약우정', 쌍갑포차를 방영했으며, 현재는 '저녁 같이 드실래요?'를 방영 중이다. 웹툰 '정상회담: 스틸레인3'은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으로 올여름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편,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안드로이드 OS 6월 MAU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과 네이버 시리즈의 MAU가 591만명을 돌파하며,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 MAU를 합친 408만명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공적마스크 판매 종료 12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 판매 종료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공식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다양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연합뉴스

6·17 이전 규제지역 '잔금대출 경과조치'

>> 1면 '신규 규제지역…'서 계속

예컨대 이번에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서구 소재의 A 분양사업자가 지난해 2월 1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면 수분양자 잔금대출에 한해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

아울러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잔금대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예컨대 수원 권선구는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지난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난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권선구에서 2월2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잔금대출 시 LTV 70%가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2월21일부터 3월2일 사이에 나간 사업장은 LTV 60%를, 3월2일부터 6월18일에 나간 사업장은 LTV 50%가 적용된다. 6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은 LTV 40%(투기과열지구 기준)가 된다.

규제지역 지정 전까지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도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이 같은 잔금대출 조치는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에 한해 적용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는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가 적용돼 지정 전까지 대출 받은 범위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중도금총액이 분양가(6억원)의 40%인 사업장에서 2억4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뒤 비규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면, 잔금대출은 2억4000만원내에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모바일 전자고지·환전 서비스 가능해 진다

과기부 '2020 제도개선 계획' 발표

전기차 220V 콘센트 충전 서비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작업 진행중
자동복구 누전 차단기 '원격점검'

앞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본인인증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일반 220V 전기 콘센트 시설을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돼 총 63건 과제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이 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의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15개 이상 과제가 올해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KT·카카오페이·네이버 등이 요청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할 수 없었다. 스타코프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정부는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이 가능해 ATM 기기를 활용한 자금 지급은 불가능했지만 고객이 금융회사,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해 무인기지국의 단순 전원 오류에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직접 출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출동 없이도 원격으로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파법상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전자파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나,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일반 가정용 게임기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업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LTE 무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지위 획득이 필요하지만, 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납입자본금 30억원은 중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다양한 기업이 IoT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의 경우,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해 같은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은 불가능했다. 정부는 공유주방을 통해 신규 요식업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전파법상 '생체신호 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 및 인증기준이 부재해 실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위급상황에 대해 신속 대응이 필요한 특정 시설에서 인명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파의 혼·간섭 영향 등을 분석해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은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